

## 공공서사와 뉴스 번역: 한일갈등서사의 라벨링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박 미 정  
(한국외대)

### 1. 들어가기

해방 이후 한일관계는 끊임없는 갈등 서사로 충돌해오고 있다. 1965년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단절됐던 국교는 정상화되었지만, 식민지배의 성격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는 역사에 대한 기억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구성하고 이해하게 한다. 특히 책임과 배상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식민지배역사에 대해 양국 국민은 서로 다른 서사적 위치(location)에서 기억하고 이야기한다. 일본종군위안부(이하 위안부) 및 징용노동자 등 이른바 과거사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해석공동체에 의해 상이한 집단기억으로 재현되는 대표적인 갈등 서사<sup>1)</sup>이다.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1)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한일과거사문제에 대한 라벨링 연구의 범위를 ‘위안부’ 및 ‘강제징용’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독도-타케시마’ 등의 지명에 대한 갈등

이러한 갈등 서사는 위안부와 징용노동자의 성격을 둘러싼 양국의 첨예한 인식 차이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한일갈등서사의 핵심 쟁점은 강제성과 자발성 및 피해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로 귀결된다(홍하은 외 2014; 이지영 2013; 김희범, 우형진 2016). 이러한 갈등서사를 둘러싼 양국의 시각 차이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위안부(서사 참가자)나 징용노동자소송(서사 사건) 등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지칭하는 지시어이다. 한국 언론매체는 위안부를 ‘위안부피해자<sup>2)</sup>’ 또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로 보도한다. 반면, 대다수의 일본 언론은 위안부를 ‘전(前)위안부’(元慰安婦)로 지칭한다. 징용노동자소송 역시 한국언론은 ‘강제징용피해자’소송으로, 일본 언론은 ‘전(前)징용공’소송(元徴用工 訴訟)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Fish 1980: 219)<sup>3)</sup>에게 선호적인 해독(preferred reading)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지시어 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국에서는 ‘피해자’ 표현 추가)하거나 배제(일본에서는 ‘피해자’ 표현을 배제) 또는 완곡어법(성노예→ 위안부)을 사용하는 담론 행위를 베이커(Baker 2006: 122)는 “라벨링 프레임(framing by labelling)”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베이커가 서사 연구에서 라벨링 프레임에 주목한 이유는 “이름과 제목이 강력한 프레임 수단”(2006.: 123)이 되기 때문이다. 라벨링은 서사의 핵심 요소(참가자, 사건, 배경 등)를 가리키거나 규정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담화 표지(index)로, 주요 기능은 문화 구성원들에게 “해당 서사에 대한 반응을 안내하고 제한하는 해석 프레임<sup>4)</sup>을 제공”(2006.: 122)하는 것이다.

은 라벨링의 또 다른 범주에 속하고(2.2절 참조), ‘소녀상’ 등의 라벨링은 ‘위안부’의 하위 범주에 속하기도 해서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2) 본문과 주석에서의 굵은 고딕체는 모두 필자 강조. 라벨링 분석의 특성상 단어와 단어를 차별화해서 강조,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밑줄 표시만으로는 가독성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임.  
3) 피시(Fish 1980)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해석공동체를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임의의 사회집단으로 규정한다. 한편, 담론이론에서는 해석공동체를 구성원들의 담론을 통해 사회현실의 해석을 공유하는 사회집단(김경모, 정은령, 2012: 112; 필자 강조)으로 본다. 언어학자들은 해석공동체 대신 담론공동체(discourse community)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한다(Chandler 2006; 강인규 역 2006: 375).  
4) 프레임은 특별한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필터링하도록 유도하여 본질적으로 다차원 현실의 일부 측면을 다른 측면보다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강력한 수사학적 실체이다(Kuypers 2009: 181).

폰 보리에스(Von Borries)가 강조한 것처럼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후손들은 특정 사건이나 전개 상황을 서로 대조적인 방식으로 기억하고 소화한다(2009: 198-203). 식민지배(일본)와 피지배(한국)의 관계에 있었던 한일 양국의 후손들은 동일한 과거사에 대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들을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서사 버전으로 재생산해낸다. 앞서 제시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부와 강제노동자이슈와 같은 한일갈등서사는 한국 문화권에서는 ‘가해자 vs.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일본 문화권에서는 이미 청산이 끝난 ‘과거 문제’의 프레임으로 재규정(retelling)된다. 이렇게 치열하게 기억의 투쟁을 벌이는 한일갈등서사는 문화적으로 교섭될 수 없는 통약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길항관계에 있는 한일갈등서사가 공적 기관(외교부 등의 정부 기관)의 서사 공간을 거쳐 공공서사로서의 권위를 획득하고, 언론매체의 담론 실천을 통해 공공서사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양국 간 대표적인 갈등서사인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라벨링을 통해 공공서사와 번역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 가정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한일갈등 뉴스의 라벨링 프레임 분석(1차 분석)을 통해 공공서사와 저널리즘 규범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2)라벨링 한일번역 분석(2차 분석)을 통해 번역가가 원천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의 공공서사와 목표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의 공공서사 사이의 통약불가능성을 어떻게 협상 또는 중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이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연구 질문은 다음 3가지이다. 단, 하기 연구 질문에서 언급하는 한일갈등서사는 ‘위안부’와 ‘징용노동자’에 대한 라벨링 분석으로 한정된다.

첫째, 한국과 일본정부는 갈등서사(과거사이슈)를 자국의 지배적인 공공서사로서 공고히 하기 위해 라벨링 프레임 활용하고 있는가?

둘째, 만약 국가 차원에서 공공서사의 홍보와 배포를 위해 라벨링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다면, 국가 기관의 라벨링 프레임은 양국의 저널리즘 보도 관행을 제약하는 텍스트 규범으로 작용하는가?

마지막으로, 첨예하게 투쟁하는 갈등서사 한일뉴스번역에서 번역가는 ST의 공공서사와 TT의 공공서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중개하고 타협하는가? 이다.

첫 번째 연구 질문과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연구 목적 (1)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했고, 마지막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연구 목적 (2)로 가기 위한 질문이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서사 및 라벨링 개념은 베이커(Baker 2006)가 여러 번역 사례 분석을 위해 적용한 서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서사는 “모든 수준의 사회 조직에서 갈등을 생성, 유지, 중재 및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을 구성”(Briggs 1996; in Baker 2006)한다는 점에서 갈등이슈 분석에 유용하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인 분석 틀이 될 베이커의 서사 개념 및 라벨링 모델, 공공서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한일갈등이슈의 라벨링 프레임이 국가 차원의 권력 구조 재생산과 자연화(naturalization)<sup>5)</sup>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서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한다.

## 2. 한일갈등서사

### 2.1 서사의 개념과 한일갈등서사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논의하는 서사(narrative)는 모나 베이커(2006)가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에서 채택한 서사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베이커는 서사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고 권력 투쟁의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에 주목했고, 번역사와 통역사가 서사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베이커의 서사 이론은 구조적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서사학이나 언어학적 접근보다는,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세상과 현실을 (처음)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는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학적 접근법에 가깝다. 즉, “우리는 서사를 통해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이해하고 의미가 통하게 되고, 또한 서사와 서사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정체성을 구성한다”(Somors 1992: 600)는 것이 서사 이론의 대전제이다. 베이커는 책 서문(2006: 3)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서사 개념이 공공서사 표현의 **정상화(normalization)** 효과라는 측면에서 푸코(Foucault)의 담론(discourse)<sup>6)</sup>과 바르트(Barthes)의 신화(myths)<sup>7)</sup>와 어느

5) 2.1절 참조

6) 푸코는 담론 분석과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로 꼽힌다(Barker and

정도 중첩된다고 언급한다. 푸코나 바르트와 같은 후기구조주의학자들은 현실은 구성되는 것이고, 가치(value) 역시 객관적인 진실(truth)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서 간주한다. 푸코의 ‘담론’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서사가 현재 작동하는 사회-정치적 구조(에피스트메)<sup>8)</sup>를 반영하여 살아있는 권력들(persons in bio-power)을 **정상화(normalizing)**시킨다(Foucault 1980; in Kirkscey 2008: 12)는 점이다. 한편, 바르트는 신화가 **자연화(naturalization)**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Barthes 1977: 45-46)고 강조한다. 문화 구성원들이 서사를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의미는 가치 평가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Voloshinov<sup>9)</sup> 1973: 105) 신화는 문화적 가치가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드러내주는 것처럼 가장한다(Chandler 2006: 240). 후기구조주의학자들이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화(naturalization)의 이데올로기이다. 즉 우리에게 “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인류 공통’으로 주어진 ‘항구’적이고 ‘불변’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담론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기호작용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는다는 것이다(Chandler 2006: 345). 베이커가 서사의 특징 중 하나로 제시한 정상화(normalization)는 푸코의 술어인 정상화(normalization)와 바르트가 지적한 자연화(naturalization)와 호환 가능한 개념이다. ‘자연화’로부터 벗어나는, 이른바 ‘탈자연화’는 후기구조주의 계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며, 본 연구가 추구하는 서사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담론’과 ‘신화’의 두 용어는 후기구조주의 서

Galasinski 2001; Fairclough 2003; Wodak and Meyer 2005; Rose 2001). 그는 담론을 “동일한 계열체에 속하는 언표들의 집합”으로 정의한다(허경 2012: 15). 상기 정의에서 언표란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의 기호 계열은 그것이 ‘다른 존재’와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을 때 언표가 된다” (2012: 14). 예를 들면, 위안부소송이라는 통합체의 경우 계열체적으로 대체 가능한 언표들이 존재한다. ‘위안부피해자소송’, ‘중군위안부피해자소송’, ‘전(前)위안부소송’ 등. 이들 계열체의 기표들은 동일한 사건을 지시하지만 각각 다른 내포적인 이데올로기를 함축한다.

7) 신화(myth)는 의미화(signification)의 세 번째 단계로 특정한 세계관을 지시하는(에컨 대 남성다움, 여성다움, 개인주의, 객관주의 등) 문화적으로 특수한 개념들을 드러낸다(Chandler 2006: 241).

8)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인식의 틀 또는 인식의 장(場).

9) 초기 연구의 많은 부분에서 ‘담론’이라는 용어는 바르트(Barthes 1967)나 볼로시노프(Volosinov 1973)로부터 나온 용어를 느슨하게 사용한 것이다(앨런 2004: 177)

사 패러다임의 범주 내에서 논의될 것이다.

담론 및 기호학을 교차하는 베이커의 서사 개념 및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사건은 스스로를 이야기(story)로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White 1987: 4) 우리가 사건들(events)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서사화하고 사건의 의미에 대한 구조와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Baker 2018: 180). 둘째, 모든 서사 내용은 일정한 프리즘 또는 특정 관점을 통해 필터링 되기 때문에(Rimmon-Kenan 1983; in Baker 2006: 17), 과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about)’ 모방이나 재현은 있을 수 없다(Kellner 1989; in Msihler 1995: 103). 셋째, 서사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맥락이라는 점에서(Fisher 1987: 193) 해석 공동체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과 성향을 취하도록 유도한다”(Baquedano-López 2001: 343). 넷째, 서사는 일정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설명을 정상화(normalizing)시켜서, 그것이 자명하고 양성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한다(Baker 2006: 11).

즉 서사는 현실을 구성하고(→구성주의), 구성된 현실은 우리에게 인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진실처럼 보이지만(→자연화)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 특정한 태도와 입장을 취한다(→담론)는 점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서사 개념이 후기구조주의의 범주 안에 위치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위안부나 징용노동자이슈처럼 서사 프레임을 통해 재현되는 역사적 사건은 문화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가지는 역사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일갈등서사를 양국 간 역사 인식의 간극으로 설명하는 이화준(2014)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가치와 국가이익에 따라 기억을 선택하고, 선택된 기억에 의해 국가가치가 증폭되며 다시 그 기억을 동원하는 구조가 진행된다. 한일갈등서사는 이러한 양국의 “기억투쟁” (이화준 2014: 7)의 산물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한일갈등서사 모두 ‘피해자’ 프레임이 동원되지만, 피해의 내용(식민지배 vs. 원폭)과 주체(한국 vs. 일본)는 양 서사 버전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한국)는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자의식이, 후자(일본)는 태평양전쟁의 원폭에 대한 피해자의식<sup>10)</sup>이 각각 국가 서사의 강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10) 일본에서는 전쟁의 책임이 군국주의적인 정치 지도자와 군부에게 있는 것이지 인민에게는 없다(小森陽一 2002: 3)는 서사가 형성된지 오래다. “어느 국가건 자국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신화를 지키려 하고 따라서 자국에게 불리한 서사

이러한 맥락에서 서사 프레임을 통해 재현되는 식민지배역사는 **단 하나의 객관적인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사의 경쟁적인 측면을 강조한 피셔(Fisher)는 “인간의 의사소통은 다른 이야기와 경쟁하는 이야기로서 역사적이자 상황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1987: 2)고 주장한다. 서사 분석은 **복수의 경쟁 버전**을 잠재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한일갈등서사 가운데 어느 버전이 **단 하나의** 역사적 진실인가를 따지는 것은 서사 분석에서 중요하지 않다. 서사 분석의 중요한 논의는 우리가 서사적인 증개 없이는 세상과 사건에 대해 접근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 윤리, 객관성 및 이해의 관점을 서사를 통해 직접 형성(shape)해 나간다”(Bennett and Edelman 1985: 159)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어떤 사건과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자명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미 담론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공서사의 맥락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한일갈등서사를 ‘**자연화(naturalization)**’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2.2 갈등이슈에 대한 라벨링 프레임

베이커는 번역에서 서사를 프레임화하거나 재프레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사의 핵심 전략(①시간적, 공간적 프레임링<sup>11)</sup>, ②선택적 전유를 통한 프레임링, ③라벨링(범주화)을 통한 프레임링, ④참가자들의 재배치) 중 하나로 라벨링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2006: 112). 라벨링은 어휘 항목, 용어 또는 문구를 사용하여 사람, 장소, 그룹, 사건 또는 서사의 기타 핵심 요소를 규정하는 모든 **담론적 과정**을 말한다(2006: 122). 라벨링 프레임링의 표현은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와 신념을 드러내는 담론(Foucault 1972; Kress 1985 등 참조) 그 자체가 된다.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과정과 언어적 과정 모두에 대한 분야로 여겨지며, 이런 두 종류의 과정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Trew 1979b;

는 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이화준 2014: 14).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망각을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2002: 269)는 ‘민족정화사관’으로 칭했다.  
11) 본고에서는 라벨링을 라벨링 프레임링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느슨하게 사용하지만, 라벨링 프레임링이라는 술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개입”(Baker 2006: 106)을 강조하는 동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in Fairclough 1995: 이원표 역 2004: 39). 즉, 라벨링과 같이 갈등서사 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선택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베이커는 서사에 대한 번역의 증개를 논의하기 위해 라벨링 개념을 도입(Baker 2006: 112)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라벨링에 대한 논의를 번역뿐만 아니라 강력한 서사 전달체(vehicle)인 언론매체의 생산물(뉴스 텍스트)로까지 확장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저널리스트들에게 제도적인 구속으로 작용하는 한일갈등 이슈의 공공서사가 저널리즘 관행 속에서 어떻게 정상화(normalization)되고 있는지(1차 분석), 그리고 번역 텍스트에서는 저널리즘의 제도적인 관행과 공공서사가 번역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2차 분석)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시어에 대한 라벨링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당 서사에 대한 해석 프레임을 제공하는 담론 행위이며, 이때 이 담론 도구(라벨링)에는 발화자의 태도나 의도를 나타내는 이데올로기가 전제<sup>12)</sup>되어 있다. 예컨대, ‘우한바이러스’라는 라벨링에는 2019년 시작된 대규모 전염병 팬데믹이 중국 우한에서 기원했다는 반(反)중국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다. 한편, ‘우한바이러스’ 라벨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19’ 명칭은 ‘우한바이러스’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이러한 완곡어 라벨링은 대립하는 상대 서사 버전(명시적이고 감정적인 기표(記表)를 사용한 라벨링)과 경쟁하면서 해석공동체에 게 자신들이 의도하는 서사에 대한 선호적인 해독을 유도한다.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2020년 1월~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공용 미디어의 뉴스 보도에서 ‘우한바이러스’ 라벨링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중국 정부라는 거대한 패권이 배포하는 완곡어 라벨링 프레임링이 지배적인 공공서사로서의 지위를 획득<sup>13)</sup>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한바이러스’ 라벨링은 집단서사로서의 세력을 잃게 된다. 비록 ‘우한바이러스’ 라벨링을 통해 재현되는 서사는 약화되었지만, ‘우한바이러스’ 서사가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된 것은 아니다. ‘우한바이러스’ 라벨링은 글로벌 메타서사<sup>14)</sup>로서의 지위에서 탈락했을 뿐, 여전히

12) 전제는 ‘미리 만들어진’ 요소들로서 텍스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텍스트 안에서 당연시되는 가정들을 의미한다(Fairclough 1995; 이광수 2013: 183-84 재인용).

13)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은 정치적 메타서사의 생존과 순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Baker 2006: 45).

대항 서사 버전으로서 경쟁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가 코드화(encoded)되어 있는 지시어나 명칭은 모두 서사의 라벨링에 해당되는가? 비판적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이하 CDA<sup>15)</sup>)의 분석 도구 중의 하나인 어휘 범주화 역시 사회적으로 공유된 평가적 신념 표현이다. 또한 “일반적으로나 맥락적으로 가치나 규범들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고, 가치 판단 그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반 다이크 2004: 40) 되는 담론 장치라는 점에서도 라벨링과 유사하다. 예컨대 ‘테러리스트’나 ‘토착 왜구’는 이데올로기가 전제된 담론 구조로서의 어휘 표현이긴 하지만, 베이커가 제안한 라벨링은 아니다. 앞서 기술한 ‘우한바이러스’ vs ‘코로나 19’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서사 메카니즘으로서의 라벨링은 반드시 해당 서사와 경쟁하는 또 다른 서사 라벨링이 존재해야 한다. 즉, 갈등서사의 라벨링은 (1) ‘직접적인 표현’에 대한 ‘완곡어’(예: 성노예 vs 위안부)가 동시에 복수로 존재하거나, (2) 라이벌 명칭(예: 독도 vs 타케시마)이 서로 다른 버전의 대항 서사로서 경쟁 구도를 이루어야 한다. 반면, ‘테러리스트’나 ‘토착 왜구’는 대안(代案)이 되는 완곡어나 라이벌 어휘가 담론 구조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커의 라벨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벨링 개념의 핵심은 **대항 서사와의 경쟁과 공존(coexist)**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에 대한 ‘완곡어’ 라벨링(1)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한일갈등서사를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 절에서는 한일갈등이슈에 대한 공적 기관(예:한국 외교부, 여성가족부, 정의기억연대 등과 일본 외무성, 제트رو, 경제산업성 등)의 라벨링 프레임의 대표적인 사례(‘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라벨링)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가 자국의 갈등서사버전에 공공서사로서의 정당성과 힘을 부여하기 위해 라벨링 프레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3 공공서사로서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 프레임

사회이론가인 서머즈(Somers)와 깁슨(Gibson)의 서사 모델에서 공공서사(public narratives)는 가족, 종교 또는 교육기관, 미디어, 국가와 같이 개인보다 더 큰 사회 및 제도적 구성에 의해 정교화되고 순환되는 이야기로 정의된다(Somers and Gibson 1994; in Baker 2006: 33). 상기 모델에서는 공공서사의 구성 주체를 개인 단위보다 큰 모든 제도적 기관(가족~국가)으로 광범위하게 상정하고 있지만, 본고에서 논의하는 공공서사는 공적 기관(정부)이 권위를 보증해주는 국가 담론 차원의 서사로 그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한일갈등이슈와 같이 국가 간에 첨예하게 충돌하는 국가 서사(예: 반일민족주의, 국수주의 등)는 공공서사의 범위 내에서도 메타서사(meta-narratives) 쪽에 근접한 정치적, 제도적인 서사이기 때문이다. 한일갈등서사는 국가 차원에서 구성되고 배포될 때 공리적 서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공공서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한일갈등서사 버전이 공공서사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권위 있는 권력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의 지배적인 기관(dominant institution)으로서 공적 기관은 외교적인 갈등서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양국의 공적 기관은 갈등서사의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 동일한 일련의 사건을 자국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내포적인 의미가 되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화한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기관이 자국의 갈등서사를 홍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라벨링 프레임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1〉 위안부 라벨링 사례

한국 (예 1)	한·일간 <b>일본군위안부 피해자</b>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외교부 대변인 발표 내용 중 발췌)
일본 (예 2)	全ての <b>元慰安婦</b> 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の事業を行うこととする. (역번역:모든 <b>전위안부</b>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한다) (기시다(岸田) 당시 일본외상 발언 중 발췌)

14) 공공서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Baker 2010a: 351)을 미치게 되면 메타서사로 발전하게 된다. 메타서사는 문화적 거대서사(grand narratives) 또는 슈퍼서사(super narratives)로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서사로서의 공공서사를 강조하기 위해 메타서사라는 용어를 병행해 사용하기로 한다.

15) CDA는 미시적인 자료분석에만 치중한 담론분석과 달리 사회적 실천으로서 담론 효과를 중층적으로 보여주도록 구조를 발전시켰다(이은주 2015: 52).

한일 양국 사이의 핵심 과거사 현안인 위안부피해자 문제는 한일정상회담

(2015.11.2.)을 계기로 국장급 협의가 가속화되다가 2015년 12월 28일 개최된 한일외교장관(당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외무대신) 회담 결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다. 상기 한국 (예 1)은 외교부 홈페이지(16)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 중 일부를 소개한 내용이다. 같은 사건(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역시 日韓兩外相共同記者發表(역번역: 일한양외상공동기자발표)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표 1>의 일본 예 2는 다음은 기시다(岸田) 당시 일본외상이 발언한 일본 정부의 입장 중 일부이다.

### 2.3.1 한일 정부의 위안부 라벨링 활용과 공공서사

한국정부는 외교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상단에 [여성·아동폭력피해자] 메뉴를 배치하고, 그 하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sup>17)</sup>이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해 위안부이슈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메뉴와 하부 페이지 명칭 모두 ‘피해자’라는 라벨을 붙여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비인도적 범죄 행위 등 가해의 서사를 강화시킨다. 권위 있는 공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라벨링 프레임은 공공서사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법률(위안부피해자법<sup>18)</sup>: 제17440호) 내에서 명시화되는 위안부 관련 라벨링 프레임은 합법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공공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동 [위안부피해자법]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이다. 즉, 한국정부는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라는 라벨링 프레임의 공공 기관이라는 서사 공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명확히 드

러나 있다.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된 관련 PDF 파일을 열어보면 위안부는 元慰安婦(역번역: **전위안부**)로 라벨링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에서의 라벨링과 달리, 일본에서는 공적인 기관(외무성)에서 ‘**피해자**’라는 기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위안부 갈등의 핵심 쟁점인 ‘강제연행’ 여부에 대해 일본정부 입장을 다음과 명확히 밝히고 있다.

#### ● 「強制連行」

これまでに日本政府が発見した資料の中には、軍や官憲によるいわゆる強制連行を直接示すような記述は見当たらなかった。

#### ● 역번역: 「강제연행」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은 볼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공적 서사 공간을 통해 위안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공서사(강제동원된 피해자)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미 청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위안부에 대한 공공서사를 홍보하고 있다.

### 2.3.2 한일 정부의 징용노동자 라벨링 활용과 공공서사

한일 양국에서 징용노동자이슈는 2018년 10월 있었던 강제징용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더욱더 첨예한 갈등서사로 경쟁하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은 대법원배상판결이 내려진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일본정부는 의도적으로 징용노동자에 대한 라벨링을 변경(元徴用工(전징용공)→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의도적인 라벨링 변경과 공공서사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한일 양국정부의 징용노동자 라벨링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외교부 홈페이지<sup>19)</sup>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정부 입장]이라는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하고 정부의 입장 발표문(당시 이낙연 총리 명의)을 게시하고 있다. 중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 [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7655](http://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7655)

17)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8.do](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8.do)

18) 정식명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9) <http://www.mofa.go.kr/www/index.do>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 희망한다. [2018. 10. 30.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한국정부의 권위자(총리)가 발표한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입장문은 공공서사로서의 공신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입장문 내에서 총리가 지칭한 징용노동자 라벨링(**강제징용 피해자**)은 징용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공공서사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공공서사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20)를 통해 징용노동자를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 역번역: **구조선반도출신 노동자**로 명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교청서(308)에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구조선반도노동자)**문제에 대한 외무장관담화(2018년 10월 30일)를 실고 있다. 징용노동자배상판결이 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징용노동자에 대한 호칭이 **元徴用工(전징용공)**로 통일되어 있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徴用(징용)이라는 단어에는 ‘일정한 업무에 **강제적으로** 종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강제성’을 부인하고 ‘자발성’을 강조하는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강제성의 내포적인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새로운 라벨링(노동자)을 통해 한국의 공공서사(강제징용피해자<sup>21</sup>)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다음 NHK의 보도(2018년 11월11일<sup>22</sup>)를 통해 우리는 일본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라벨링 변경을 도모한 계기가 강제징용대법원판결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韓国の最高裁判所が、太平洋戦争中の徴用をめぐる裁判で新日鉄住金に賠償を命じた判決を受けて、政府は、すべての人が徴用されたわけ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として、「旧民間人徴用工 などとしてきた呼称を「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 に改めました

20)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4516.html](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4516.html)

21) 한국어의 ‘징용’에도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일제의 강제적인 동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강제’라는 기표가 추가된 ‘강제징용’이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2)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10820.html>

(역번역: 한국의 최고재판소가,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을 둘러싼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에게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징용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민간 **인정용공**] 등으로 불러왔던 호칭을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로 변경했습니다.)

### 3. 분석

#### 3.1 분석 방법 및 절차

본고에서는 한일갈등이슈의 공공서사가 한국 언론매체와 일본 언론매체의 텍스트 규범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보수언론, 진보언론을 선정해 이들 언론사에서 각각 갈등이슈 라벨링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한국 언론매체로는 연합뉴스(통신사), 중앙일보(보수), 동아일보(보수), 한겨레(진보)를, 일본 언론매체로는 교도통신(통신사), 지지뉴스(통신사), 요미우리(보수), 산케이(보수)를 각각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언론매체를 통신사 및 보수, 진보 계열로 골고루 구성한 이유는 미디어가 지향하는 이념이 공공서사와 충돌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환대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조선일보의 한일번역은 연합뉴스의 한일번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공공서사와 번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데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통신사를 2곳(교도, 지지)으로 정한 이유는 한국의 연합뉴스에 비해 기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사들이 갈등이슈 라벨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언론사의 검색 창에 라벨링되지 않은 중립적인 단어와 라벨링된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 건수를 비교했다. 검색 결과 중립적인 단어 건수를 기준으로 라벨링된 단어를 백분위로 환산해서 라벨링된 단어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했다. 다만, 검색 가능 기간(예: 연합뉴스는 1년 이하, 나머지 언론사는 10년 이상 등) 및 검색어 기준에 따른 변수(예: 강제징용으로 검색할 때와 강제징용문제로 검색할 때 등의 차이)가 언론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

도 했지만, 한일갈등이슈(위안부와 강제징용문제로 한정)에 대한 공공서사와 저널리즘 규범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수준의 사용빈도 조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색어의 기준이 될 갈등서사의 중립적인 단어를 한국언론에서는 ‘위안부’와 ‘강제징용’으로, 일본언론에서는 ‘慰安婦(위안부)’와 ‘徴用(징용)’으로 각각 정했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징용’이라는 단어에는 ‘강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한국언론은 ‘강제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의 징용노동자를 가리킬 때는 ‘**강제징용**’으로 라벨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당시의 ‘징용’에 대해서는 ‘강제’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강제징용**’은 특정 역사적 서사(일제 징용노동자)를 내포하는 라벨링이다. 반면, 일본언론에서는 한국언론과 달리 ‘강제’를 배제한 ‘徴用(징용)’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한다. 단, 일본매체에서 ‘強制徴用(강제징용)’이라는 라벨링이 사용된 경우는 한국의 권위자나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직접인용, 간접인용을 소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위안부’와 달리 ‘징용노동자’에 대한 중립적인 단어는 한국언론(‘강제징용’)과 일본언론(‘징용’) 사이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국 언론매체에서는 일본의 공공서사가 반영된 라벨링인 ‘전위안부’와 ‘전징용공’으로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0건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검색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한국의 모든 언론매체는 한일갈등서사를 다루는 뉴스 텍스트에서 적어도 일본의 공공서사를 반영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공서사 라벨링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한국의 공공서사를 반영한 라벨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언론매체가 얼마나 공공서사 라벨링을 사용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피해자’ 프레임이 배제된 ‘위안부할머니’와 ‘징용노동자’를 함께 검색해 역시 백분위로 환산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에 대한 한일번역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 언론매체의 일본어 번역 사이트에서 일본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으로 단어(한일번역어)를 검색했다.

### 3.2 한일갈등서사 뉴스 및 번역 라벨링 분석

#### 3.2.1 한국언론매체의 갈등이슈 라벨링에 대한 저널리즘 규범

한국 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에 대한 저널리즘 규범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항에서는 우선, 언론매체별로 ‘위안부피해자’와 ‘강제징용피해자’ 라벨링의 사용빈도를 백분위로 산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서사가 한국 언론매체의 강력한 텍스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일본정부 권위자의 발언이나 일본 미디어 보도에 대한 한국 언론매체의 직접인용 및 간접인용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직접인용 및 간접인용 안의 발언이나 내용은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저널리즘 관행이지만, 위안부 및 징용노동자 관련 라벨링은 서로 충돌하는 양국의 갈등서사이기 때문에 저널리스트의 선택에 따라 뉴스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한국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백분율: 2021년 1월 8일 기준)

라벨링 언론매체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강제 징용	강제징용 피해자	징용 노동자
연합	1146	594 (51%)	98 (8%)	392	45 (11%)	42 (10%)
중앙	7418	3008 (40%)	827 (11%)	2741	1123 (40%)	373 (13%)
동아	2963	1191 (40%)	967 (32%)	1084	547 (50%)	131 (12%)
한겨레	6807	3422 (50%)	921 (13%)	1447	771 (53%)	293 (20%)

〈표 2〉를 보면 한국 언론매체가 위안부나 징용노동자 보도에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 라벨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서 강제징용피해자 검색 건수가 적은 이유는 연합뉴스 검색이 1년간(검색 기간 2021년 1월)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강제징용배상판결 이슈는 2018년~2019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공서사 라벨링인 ‘전위안부’나 ‘전징용공’에 대한 검색 결과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언론은 한일갈등이슈 관련 공공서사가 텍스트 규범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할 구체적인 사례들은 상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된다.



예1) 연합뉴스(2020.04.16.)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구한반도출신노동자(일제강제 징용노동자)**문제는.....”고 밝혔다.(직접인용)  
 아사히신문은 **일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로...(간접인용)

예2) 중앙일보(2020.08.04.)  
 그러면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직접인용)

예3) 동아일보(2020.11.11.)  
 가토 관방장관은 이어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으로 매우 엄격한 상황인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계기를 한국 측이 마련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다.

예4) 한겨레신문(2021.01.29.)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새벽 이뤄진 미일 정상 전화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전 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29일 보도했다...(직접인용) 한일 관계가 악화된 핵심 원인인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거론했을 가능성도 있다.

2.3.2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강제징용배상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정부는 징용노동자에 대한 라벨링을 ‘**전징용공**’에서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로 변경한다. 이러한 강제성을 배제한 라벨링 프레임은 한국 언론매체의 직접인용 또는 간접인용에서 강제성과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전이(shift)된다. 스가총리의 발언을 직접인용한 예1)의 경우, ‘구한반도출신노동자’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로 보충 코멘트를 달고 있다. 우선, 일본의 총리는 예1)과 같이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을 하지 않는다. 2.3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권위자의 발언이나 공적 기관에서의 라벨링은 공공서사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변경한 라벨링은 공적 기관의 강력한 텍스트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3.2.2에서 잠시 뒤 확인하겠지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변경한 ‘구한반도출신노동자’라벨링이 독자에게 아직은 생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사를 따르는 일본 언론매체의 경우에

도 ‘**구한반도출신노동자(전징용공)**’의 형태처럼 괄호 안에 설명을 추가한다. 다만, 괄호 안에서 설명하는 지칭 자체가 또 하나의 라벨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징용’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일본어 모두 ‘강제성’이 내포된 단어(2.3.2 참조)이다. 한국 언론매체와 달리 일본 언론매체에서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한국의 권위자나 언론의 직접인용이나 간접인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매체의 괄호 안의 지시어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 (연합뉴스), ‘징용**피해자**’ (중앙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동아일보), ‘**강제동원피해자**’ (한겨레신문)로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피해자’의 프레임이 공통적으로 강조된 라벨링이다. 따라서 이들 언론사의 직접인용보도를 거치면서 원문(일본정부 권위자의 발언이나 일본 미디어 보도)의 ‘**자발성**’의 프레임은 ‘**피해자**’ 프레임으로 전이된다. 한일갈등이슈를 다루는 한국언론매체의 저널리즘 규범은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등의 저널리즘 윤리를 초월하는 공공서사의 신화 속에서 작동한다.

### 3.2.2 일본언론매체의 라벨링에 대한 저널리즘 규범

<표 3> 일본언론매체의 한일갈등이슈 라벨링(백분율: 2021년 1월 8일 기준)

라벨링 언론매체	慰安婦 위안부	慰安婦 被害者 위안부 피해자	元慰 安婦 전위 안부	徴用 징용	強制 徴用 강제 징용	強制 被害者 강제징용 피해자	元徴 用工 전징 용공
교도	194	31	98	157	19	6	100
지지	58	0	19	68	0	0	52
통신사 소계	252	31 (12%)	117 (46%)	225	19 (8%)	6 (2%)	152 (67%)
산케이	13036	119 (0.9%)	2291 (17%)	2800	194 (6%)	5 (0.1%)	573 (20%)
요미 우리	125	26 (20%)	54 (43%)	216	22 (10%)	5 (2%)	176 (81%)
아사히	2192	61 (2.%)	691 (31%)	1395	42 (3%)	5 (0.3%)	897 (64%)

<표 3>은 한일갈등이슈를 보도하는 일본 언론매체의 저널리즘 규범이 자

국의 공공서사의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라벨링의 사용빈도를 백분위로 산출한 표이다.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 ‘전위안부’나 ‘전쟁용공’ 등의 라벨링을 사용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산케이신문은 전자가 17%, 후자가 20%로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위안부피해자’나 ‘강제징용피해자’ 라벨링 사용빈도(각각 0.9%와 0.1%)와 비교해보면, 산케이신문의 갈등서사 라벨링 역시 일본의 서사 프레임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의 경우 ‘위안부피해자’ 라벨링이 20%나 검색되었는데, 기사의 대부분이 한국정부 권위자의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한 직접인용<sup>23)</sup>이다. 한일갈등서사에 대한 요미우리의 직접인용보도 방식은 한국 언론매체의 직접인용 방식과 차이(3.2.1 참조)를 보이는 부분이다. <표 3>에서는 한국 언론매체와의 라벨링 병렬 비교를 위해 검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2018년 10월 이후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는 일본정부에 의해 공공서사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라벨링을 일본의 언론매체에서 일제히 수용하지는 않았다(하기 예 참조).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일본 언론매체에서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 라벨링을 검색해보면, 113건이 검색되는 요미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매체는 여전히 ‘전쟁용공’ 라벨링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모든 일본의 언론매체는 정부 기관(외무성, 경제산업성 등)에서와 달리 괄호 안의 부가설명 없이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라벨링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 또는 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元徴用工)의 형태로, 2개의 라벨링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본의 모든 언론매체가 일제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격적으로 배포되는 공공서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성이 배제된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의 라벨링 프레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나 징용노동자 라벨링 모두 ‘피해자’ 프레임에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공공서사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대한 설명처럼 ‘피해자’가 포함된 검색어는 대부분 한국정부 권위자 발언의 직접인용이다. 따

23) 예: 韓国外相「慰安婦」の生存被害者を支え続ける (요미우리 2020.02.25.)  
(역번역: 한국외상 “위안부”의 생존피해자 계속 지원하겠다)

라서 일본 언론매체 역시 ‘가해자 vs. 피해자’의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이미 청산이 끝난 과거의 문제’로 한일갈등서사를 프레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갈등서사 라벨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다음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1-1) 교도통신(2021.01.08.)

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8日 故人を含む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の女性12人が日本政府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日本企業が賠償を命じられた元徴用工訴訟に続き....(역번역: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인을 포함한 구일본군중군위안부여성 12명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일본기업이 배상하도록 선고받은 전쟁용공소송에 이어.....)

예1-2) 지지통신(2021.01.08.)

慰安婦問題は「最終的に解決済み」とする日本政府の立場に反する判断で元徴用工問題で冷え込んだ日韓関係のさらなる悪化は避けられない。(역번역: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으로 보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판단으로, 전쟁용공문제로 얼어붙은 한일관계의 더 심각한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2-1) 산케이신문(2021.01.08.)

いわゆる徴用工訴訟で韓国最高裁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判決を受け、韓国では....(역번역: 이른바 징용공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일본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따라, 한국에서는....)

예2-2) 산케이신문(2021.01.23.)

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が日本政府に対し元慰安婦の女性らへの賠償を命じた判決は....(역번역: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이 일본정부에 대해 전위안부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예3) 요미우리(2021.01.08.)

韓国元慰安婦12人が日本政府を相手取り....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訴訟問題などで....(역번역: 한국인전위안부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쟁용공(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소송문제 등으로)

예4) 아사히 (2021.01.08.)

旧日本軍の慰安婦だった韓国人女性ら12人が日本政府に対し...元徴用工への賠償を日本企業に命じた2018年の韓国大法院(最高裁)判決に続き(역 번역: 구일본군 위안부였던 한국인여성들 12명이 일본정부에 대해...전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기업에게 명령한 2018년 한국대법원(최고법원)판결에 이어...)

### 3.2.3 한국언론매체의 일본어번역 라벨링

〈표 4〉 한국언론매체의 일본어 번역 라벨링(백분율:2021.01.08. 기준)

라벨링 언론매체	慰安婦 위안부	慰安婦 被害者 위안부 피해자	元 慰安婦 전 위안부	強制 徴用 강제 징용	強制徴用 被害者 강제징용 피해자	元 徴用工 전 징용공
연합	3208	1474 (45%)	320 (9%)	1162	430 (37%)	18 (1%)
중앙	397	305 (76%)	31 (7%)	246	124 (50%)	10 (8%)
동아	485	161 (33%)	77 (15%)	77	4 (5%)	42 (54%)
한겨레	1158	430 (37%)	39 (3%)	168	116 (69%)	5 (2%)

〈표 4〉는 〈표 2〉와 비교했을 때, 동아일보는 한국어뉴스 라벨링과 한일번역 라벨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나머지 언론매체들(연합, 중앙, 한겨레)은 모두 한국의 공공서사가 한일번역의 텍스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기자들이 직접 번역을 담당한다. 실제로 상기 신문사의 일본어 번역은 ST를 요약한 TT, 또는 ST를 편역한 TT의 형식이 종종 발견<sup>24)</sup>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편역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번역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분석 대상 언론매체들은 번역사의 언론매체에서의 위치(기자/전업 번역사)에 따라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이하 A그룹] vs.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하 B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B그

24) 이들 신문사의 번역 역시 대부분은 완역을 하고 있고, 특히 한겨레신문의 한일번역은 번역문에 한국어 원문을 찾아서 볼 수 있는 URL을 번역문 끝에 제시하고 있다.

룹은 전문번역사가 번역한 TT를 번역 담당 데스크가 최종 체크한 후 넘긴다. 특히, 동아일보는 권위 있는 네이티브의 최종 감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동아일보 번역에 네이티브 감수자(일본어 원어민)가 개입된다는 것은 한일갈등서사 번역이 한국의 담론공동체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A그룹은 ‘번역사=기자’이기 때문에 번역사는 번역 데스크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해당 언론사의 저널리즘 규범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A그룹의 번역 규범<sup>25)</sup>은 해당 언론사의 저널리즘 규범이 번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그룹의 한일갈등서사 라벨링 번역 규범은 해당 신문사의 저널리즘 규범과 일치한다.

반면, B그룹의 한일갈등서사 라벨링 번역 규범은 데스크의 판단에 따라 번역물의 서사 버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일갈등서사 중 ‘독도 vs. 타케시마’ 라벨링 번역은 데스크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독도’의 서사버전으로 번역해야 하는 강한 제도적 번역 규범이 존재하지만, ‘위안부’나 ‘징용노동자’의 ‘피해자’ 서사는 강제성을 띤 강력한 번역 규범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번역 담당 데스크의 통제를 받는 B그룹의 전문번역사는 자신들의 공유 서사를 번역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 〈표 4〉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라벨링 저널리즘 규범은 한일번역규범과 일치하지만, 동아일보의 라벨링 저널리즘 규범은 한일번역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적어도 번역 데스크(네이티브 감수자 포함)가 한국의 ‘피해자’ 공공서사를 공유하지 않거나, 일본의 저널리즘 규범을 중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갈등서사 라벨링에 대한 한일번역을 공공서사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패턴(㉠ ST 공공서사 < TT 공공서사, ㉡ TT 공공서사 → , ㉢ ST 공공서사=TT 공공서사, ㉣ 기타 예외)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 공공서사가 강화되는 라벨링 프레임 번역

ST: 법원 “반인도적 행위...‘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

TT: 日本軍慰安婦訴訟、①被害者ら勝訴「反人道的行為...②『慰安婦被害者に賠償』認める(역번역: 일본군위안부소송, ①피해자들 승소 “반

25) 본 논문에서는 저널리즘규범과 번역규범 모두 한일갈등이슈, 그중에서도 ‘위안부’와 ‘징용노동자’라벨링으로 한정해서 논의한다.

인도적행위...②: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 인정한다) (한겨레 2021.01.08.)

상기 예문의 ST는 직접인용 앞 부분에 '피해자'라는 기표가 존재하지 않는데, TT에서는 ① **피해자들**의 라벨링을 추가함으로써 TT는 ST에 비해 '피해자' 프레임이 강화되었다.

㉠ 한국 공공서사가 사라지는 라벨링 프레임 번역

ST: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판결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강제 징용을 비롯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TT: 元慰安婦女性が日本政府に対して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中で初めての判決で 日本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たのだ。.....菅義偉首相は、元徴用工問題ををはじめ... (역번역: 전위안부여성이 일본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운데 첫 판결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스가요시히데 총리는 전징용공문제를 비롯해.....) (동아일보 01.09)

상기 예문은 동아일보 번역 사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아일보는 한일갈등 등 라벨링 번역에서 TT 지향적인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의 이러한 번역전략은 ST의 프레임과 TT의 프레임의 불일치를 가져오고, ST에 드러났던 한국의 대일(對日) 공공서사는 TT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한편, 예2)는 중앙일보 번역으로 중앙일보 번역 가운데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이다. 중앙일보의 한일번역은 대체로 ① ST 공공서사 < TT 공공서사나 ㉠ ST 공공서사=TT 공공서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예2)는 요미우리신문을 직접인용에 대한 한일번역으로 인용 원문의 서사를 번역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한국 공공서사가 유지되는 라벨링 프레임 번역

ST: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확정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TT: 韓国政府は23日、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への賠償を日本政府に

命じた韓国地裁判決が確定したことを巡り、「被害者と相談し、円満な解決に向けて最後まで努力する」としながら...(역번역: 한국 정부는 23일, 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정부에게 명령한 한국지방법원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상담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연합뉴스 2021.01.24.)

위 예문은 가장 보편적인 라벨링 한일번역사례(ST 공공서사= TT 공공서사)이다. 따라서 TT의 프레임은 ST의 프레임에 따라 결정된다.

㉢ 기타 예외

ST: 요미우리신문은... "전 징용공 문제 등으로 일·한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고 30일 보도했다.

TT: 読売新聞は...「元徴用工(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などで日韓関係が悪化する中...」と30日 報じた (역번역: 요미우리신문은 "전징용공(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라고 30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2020.08.30.)

상기 예문은 일본정부 권위자의 발언이나 일본언론사(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직접인용문(ST)에 대한 번역 사례이다. 직접인용 속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ST(중앙일보 뉴스)는 일본의 라벨링 저널리즘 규범('전징용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TT의 번역가는 일본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공서사 강화를 위해 이용한 라벨링(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을 추가함으로써 TT에서는 일본 공공서사의 프레임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ST의 저널리즘 차원의 대한(對韓)서사가 TT에서는 일본국가 차원의 공공서사로 전이된다.

### 4. 나가기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투쟁 관계에 있는 한일갈등이슈를 한일양국정부가 라벨링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국가서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언론매체와 번역은 국가적 담론실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두에서 던진 3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과 일본정부는 갈등서사(과거사이슈)를 자국의 지배적인 공공서사로서 공고히 하기 위해 라벨링 프레임 활용하고 있는가? → 2.3 절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공적 기관에서 라벨링 프레임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만약 국가 차원에서 공공서사의 홍보와 배포를 위해 라벨링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다면, 국가 기관의 라벨링 프레임은 양국의 저널리즘 보도 관행을 제약하는 텍스트 규범으로 작용하는가? → 3.2.1항과 3.2.2항의 분석을 보면, 한일 양국 언론매체 모두 한일갈등이슈에 대한 공공서사(공적기관의 라벨링)가 저널리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언론매체의 라벨링에서는 반일민족담론을 기제로 한 ‘피해자’ 프레임이 보수와 진보 계열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강하게 드러났다. 반면, 일본언론매체에서는 정부가 국가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징용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언론매체(아사히 등)도 있었다. 일본 언론매체는 국가적인 공공서사 라벨링인 경우에도 이를 즉각적인 저널리즘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예하게 투쟁하는 갈등서사 한일뉴스번역에서 번역가는 ST의 공공서사와 TT의 공공서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증개하고 타협하는가? → 3.2.3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자가 번역을 담당하는 언론사(연합뉴스, 한겨레신문)의 번역사(기자)는 공공서사의 영향을 받는 해당 언론사의 저널리즘 관행이 그대로 번역 텍스트 규범이 된다. 즉, 이들 번역사는 양국 갈등서사 라벨링을 정보 전달 차원에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가(기자)가 속한 공동체의 공공서사의 맥락 안에서 번역을 수행한다. 즉,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의 한일번역(TT)은 갈등서사에 대한 라벨링 프레임이 ST와 동일(ST의 공공서사=TT의 공공서사)하다. 한편,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하고 네이티브 스피커의 감수 또는 데스크의 통제를 받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한일번역(B그룹)은 데스크의 판단에 따라 번역 결과물의 서사 버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공공서사를 따르는 A그룹의 번역과 달리, B그룹에서는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라벨링 번역에서 한국의 ‘피해자’ 서사가 반영되지 않는 번역물이 상당 비율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아일보는 ‘전위안부’(15%), ‘전징용공’(54%) 라벨링을 번역어로 많

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 원어민의 감수가 포함된 데스크의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보인다. 즉, 동아일보에서는 한일갈등서사번역에서도 한국의 ‘피해자’ 공공서사가 강한 번역 규범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번역 데스크의 통제를 받는 중앙일보 역시 ‘전징용공’ 라벨링의 선택 비율(8%)을 보면, 동아일보(54%)보다는 훨씬 낮지만, 연합뉴스(1%), 한겨레(2%)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한일갈등서사, 특히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라벨링 번역에서 B그룹은 한국의 ‘피해자’ 라벨링 프레임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는 번역 결과물의 갈등 서사 버전이 원문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밖에 기타 예외적인 번역 사례는 ST 자체가 총리 등 TL 문화권 권위자의 발언이나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한 뉴스로 ST의 규범이 한국의 공공서사와 충돌하는 경우이다.

라벨링은 해석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신적 표상의 담론적 표현들이다. 동시에 라벨링은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사회적 표현이자 담론적 실천 행위이다. 우리는 라벨링 분석을 통해 국가의 공적 기관은 공공서사를 의도적으로 배포하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주체(agents)이며, 주요 서사 전달자인 언론매체의 저널리즘 관행은 공공서사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적 갈등서사의 통약불가능성은 번역가에게 큰 도전이며 번역가의 개인적인 서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라벨링 분석 대상을 ‘위안부’와 ‘징용노동자’ 갈등이슈로 한정할 만큼, 본고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가 한일갈등이슈 전체의 공공서사와 번역 규범의 관계를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독도’ vs ‘타케시마’는 라벨링의 또 다른 범주가 되고, ‘소녀상’은 위안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라벨링인데, 이들 갈등이슈를 포함해 모든 한일갈등이슈를 다루는 데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일갈등이슈를 다루는 한국 제도기관과 일본 제도기관의 규범 차이를 밝혀내고, 이러한 규범 차이를 서사적인 관점에서 번역과 연결시켜 논의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뉴스 미디어의 저널리즘 규범을 제약하는 공공서사의 자연화, 정상화를 자각하게 되면 번역가는 제도적인 번역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번역 결과물이 우리의 신화를 강화하는지, 또는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유지시키는지를 읽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인규 옮김 (2006) 『미디어 기호학』, 서울: 소명출판. [Chandler, Daniel (2002) *Semiotics: The Basics*, London: Routledge.]
- 김경모, 정은령 (2012)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전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57: 109-36.
- 김희범, 우형진 (2016) 「한국과 일본 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 프레임 유형 특성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81-123.
- 반 다이크 (2004) 「신문에 나타난 의견과 이데올로기들」 앨런 벨· 피터 게릿 (편저); 백선기 옮김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7-83. [van Dijk, Teun A. (1998) ‘Opinions and Ideologies in the Press’, in Allan Bell and Peter Garrett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London: Wiley-Blackwell, 21-63.]
- 보도 폰 보리스 (2009) 「역사 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 독일 관점에서의 이론적 고찰과 실제 경험」, 동북아역사재단 (편저) 『역사 대화로 열어나가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 제1회 동아시아 역사 화해 국제포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89-231.
- 스튜어트 앨런 (2004) 「지금, 여기로부터의 뉴스: 텔레비전 뉴스 담론과 헤게모니의 구성」 앨런 벨· 피터 게릿 (편저); 백선기 옮김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34-179. [Allan, Stuart (1998) ‘News from Nowhere: Televisual News Discourse and the Construction of Hegemony’, in Allan Bell and Peter Garrett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London: Wiley-Blackwell, 105-141.]
- 이광수 (2013)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원교육』 29(3): 177-196.
- 이지영 (2013) 「일본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5): 407-429.
- 이은주 (2015) 『한국 공적 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원표 옮김 (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이화준 (2014) 「한국과 일본의 선택된 기억과 피해자의식: 양국의 기념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5(1): 1-24.
- 전재호 (2019) 「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한국과 국제정치』 35(2): 113-147.
- 허경 (2012) 「미셸 푸코의 ‘담론’ 개념 - ‘에피스테메’와 ‘진리놀이’의 사이」, 『개념과 소통』 9: 5-32.
- 홍하은, 오명원, 김성해 (2014) 「집단적 기억의 정치적 관리: 한일 갈등 이슈를 둘러싼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235-76.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Routledge.
- Baker, Mona (2018)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 Baker, Mona (2010a) ‘Narratives of Terrorism and Security: “Accurate” Translations, Suspicious Frames’, *Critical Studies on Terrorism* 3(3), 347-364.
- Barker, Chris and Dariusz Galasinski (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London: Sage.
- Barthes, Ronald (1977) *Image-Music-Text*. London: Fontana.
- Baquedano-López, Patricia (2001[1997]) ‘Creating Social Identities through Doctrina Narratives’,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8(1): 27-45; reprinted in Alessandro Duranti (ed.) *Linguistic Anthropology: A Reader*, Malden MA and Oxford: Blackwell, 343-358.
- Bennett, W. Lance and Murray Edelman (1985) ‘Toward a New Political Narrative’, *Journal of Communication* 35(4): 156-171.
- Briggs, Charles (ed.) (1996) *Disorderly Discourse: Narrative, Conflict, and Social inequality*, Oxford: Oxford U. P.
- Chandler, Daniel (2007) *Semiotics: the basics*,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 Fairclough, Norman (2003) *Analyz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Routledge.

- Fish, Stanley (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The Authority of Interpretive Communities*. Cambridge, Mass.: Harvard U. P.
- Fisher, Walter R. (1987) *Human communication as narration: Toward a philosophy of reason, value, and action*.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Kirkscey, Russell (2008) 'From homo narrans to homo attendens: A revision of the narrative paradigm' in *Conference Papers*, Pennsylvania: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Kuypers, Jim A. (2009) "'Framing Analysis,' How to Conduct a Rhetorical Framing Study of the News," in Jim A. Kuypers (ed.) *Rhetorical Criticism: Perspectives in Action*. New York: Lexington Books, 181-204.
- Mishler, Elliot G. (1995) 'Models of Narrative Analysis: A Typology', in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5(2): 87-123.
- Rose, Gillian (2001)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Materials*. London: Sage.
- Somers, Margaret (1992) 'Narrativity, Narrative Identity, and Social Action: Rethinking English Working-Class Formation', *Social Science History* 16(4): 591-630.
- Voloshinov, Valentin N. (1973)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trans. Ladislav Matejka and I. R. Titunik), New York: seminar Press.
- White, Hayden (1987a [1980]) 'The Value of Narrativity in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Critical Inquiry* 7(1); reproduced in Hayden White (1987) *The Content of the Form: Narrative Discourse and Historical Representation*, Baltimore MD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 P.
- Wodak, Ruth and Michael Meyer (eds) (2008) *Method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econd edition, London: Sage.
- 高橋哲哉 (2002) 「부정론의 시대」 小森陽一·高橋哲哉 (편저)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서울: 삼인.

[Abstract]

**Public Narrative and News Translation:  
Focusing on the Labeling Framing Analysis of the  
Korean-Japanese Conflict Narrative**

Park, Mi-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o-called past history problems, such as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s, are representative conflict narratives that are reproduced in different collective memories by the interpretive communities of Korea and Japan. This conflict narrative is formed on the basis of the sharp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personality and identity of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s. The most explicit indic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perspectives on the narrative of conflict is the expression that refers to the core elements of the narrative, such as comfort women (character) and forced labors suits (event). Korean media reports comfort women as '*victims* of comfort women', while Japanese media refer to comfort women as '*former* comfort women' ('元慰安婦'). The lawsuit for forced labors is also reported by the Korean media as a '*victims* of forced labor' lawsuit, and the Japanese media as a '*former* forced labors' lawsuit ('元徴用工'訴訟). In this way, in order to induce a preferred reading to the interpretive community, a specific directive expression is deliberately selected (in Korea, the expression 'victim' is added) or excluded (in Japan, the expression 'victim' is excluded) or alleviated ('sex slaves' is euphemistically expressed in 'comfort women') Baker (2006) describes the narrative device to be used in terms of labeling framing. As Von Borries emphasized, winners and losers, perpetrators and victims, descendants of the rich and poor remember and digest certain events or history in contrasting ways

(2009:198-2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ws reports and Korean-Japanese translations of issues o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the narrative concept of Mona Baker (2016). Specifically, we will clarify how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using labeling framing to solidify the issue of past history as a dominant public narratives, and examine how labeling framing used at the national level affects the journalism reporting practices of the media in both countries. Finally, we examine how the translator mediates and negotiates the incommensurability between the public narratives of their own country (Korea) and the public narrative of the target language culture area (Japan) through analysis of labeling translation.

▶ Key Words: narrative, public narrative, labelling framing, conflict, incommensurability

▶ 주제어: 서사, 공공 서사, 라벨링 프레임, 갈등, 통약불가능성

박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부교수

ppsmjj@naver.com

관심분야: 기호학, 번역교육, 재번역, 통역평가, 문학번역, 미디어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4일